

“작년 내부회계 관리 ‘비적정’ 의견 전체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비적정 의견엔 투자주의 종목 지정 내년부터 5000억 이상 기업 적용

“작년 기준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상장사는 전체 3% 정도로 나타났다. 올해는 더 줄여나가는 게 목표다.”

4일 서울 아모레퍼시픽홀에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K-SOX 리더는 “외부감사인도 기업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처음이라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시행착오 불가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여기서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서울 아모레퍼시픽홀에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발표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올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내년 1월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2조원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2022년에는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가 별도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

준은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없으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임성재 리더는 “15년 전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기업 담당자가 외부감사인 대응이 가장 힘들다(64%)고 응답했다”면서 “올해 첫 도입

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 기준도 미흡”

다음 발표를 이어간 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현재 외부감사업무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선 외부감사인은 생각보다 감사진도가 느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의견을 줘야 할 지 고민이 크다. 정근영 파트너는 “현재 설계·운영 수준에서 어떤 감사의견을 줘야 하나, 많이 미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적정 의견을 줘야 하나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자문하는 자문법인 역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제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외부감사인과 자문법인 간의 견이 갈릴 때 혼란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근영 파트너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기업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외부감사인은 모든 계정을 보기보다는 리스크베이스를 중점적으로 본다”면서 “남은 시간동안 중요한 것들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근영 파트너는 ▲MRC▲IPE▲ITCG▲사전 제출 재무제표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사전 제출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회계관리팀은 사전에 회계팀과 만나 분기 수정 사항, 신 기준서 적용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위원회 평가기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자의 보고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감사위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양해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보고를 이사회 전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정보통신망법 법안 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청신호?

법사위·본회의 표결만 남아 김병욱 의원 등 연내 통과 촉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뒀다. 사실상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안으로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민영 기자

다”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빅데이터 혁신은 기업 및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이라며 “이 때 활용되는 ‘가명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대 1 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국내기관 해외투자 3분기 3124억달러

올해 3분기 국내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 해외투자가 증가하며 투자 잔액이 120억달러 넘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시가 기준 3124억2000만달러로 2분기 대비 120억8000만달러(4.0%)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4.0% 증가
자산운용사 90.7억달러 ↑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 투자 잔액이 90억7000만달러 늘어난 1781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외국환은행의 경우 각각 14억9000만달러, 14억4000만달러 증가한 889억1000만달러, 25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203억5000만달러로 7000만달러 늘어났다.

종목별로 보면 해외 주식투자가 30억3000만달러 늘면서 96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국 주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2분기 대비 투자잔액 증가 규모가 감소했다.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는 1741억7000만달러로 88억4000만달러 늘었다.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투자잔액 증가세가 지속됐다.

외화표시증권인 코리아페이퍼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은행(+5억달러)을 중심으로 2억2000만달러 증가하며 42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김희주 기자 hj89@

지난달 외환보유액 4075억弗 ‘사상 최대’

전월 대비 11억4000만달러 늘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74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1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지난 10월에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을 보면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운용화증권(MBS) 등 유가증권이 3765억1000

만달러로 전월 대비 2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 등에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201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5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도 26억2000만달러로 5000만달러 줄었다. IMF SDR(특별인출권)은 33억7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금도 47억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DXY)는 지난달 98.37로 0.7% 상승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74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1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지난 10월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보유액(4063억달러)은 홍콩(4406억달러)의 뒤를 이어 세계 9위 자리를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1052억달러), 2위

는 일본(1조3245억달러), 3위는 스위스(8460억달러)로 자리를 지켰다.

/김희주 기자 hj89@